

이슈파워



풀 하나에 어린이·성인용 함께 설치 사고...대법 “공단 배상책임”

대법 “코스로프로만 구분해 놓은 자체로 설치·보존상 하자”

한 수영조에 수심이 다른 성인용 풀과 어린이용 풀을 함께 설치해 일어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은 수영장을 운영하는 공단에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정모씨 등 4명이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성인용 수영조와 어린이용 수영조를 분

리하지 않고 동일한 수영조에 설치한 채 ‘코스로프’(course rope)로만 구분해 놓은 것은 그 자체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공단에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부모의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의 발생에 공동원인이 됐더라도, 공단에 이 사건 수영장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운동시설인 수영장과 편의시설인 물 미끄럼틀, 어린이용 수영조를 분리해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체육수영장에 수심 표시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돼있는데 이 사건 수영장은 위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관점에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기준으로 법경제학에서 논의되는 ‘핸드공식’(미국 핸드 판사가 제시한 공식)을 최초로 재판에 적용했다. 핸드공식은 사고 방지를 위해 사전 조치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이 사고가 발생할 확률과 사고 발생 시 피해 정도를 곱한 것보다 작을 때에는 공작물 관계자가 위험방지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어린이가 물에 빠지는 사고로 발생하게 되는 피해의 정도와 수영장 관리자가 사고방지를 위하여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비교하면 전자가 훨씬 더 클 것”이라며 “성인용과 어린이용 수조를 물리적으로 분리해 사고 위험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는 하나의 수영조에 어린이용 구역과 성인용 구역을 같이 설치해 어린이가 성인용 구역에서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수영장 관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곡성군의의회 여성의원 2명 ‘머리채’ 싸움 파장 일파만파

경찰 “돈봉투 발언 진위 여부 확인 방침”

민주당, 소속 의원 대상 진상조사 나서기로

전남의 한 기초의회 여성 의원 간 몸싸움 과정에서 거론된 돈봉투 사건에 대해 경찰과 민주당이 사실 관계 확인 방침을 밝히면서 파문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곡성경찰서는 지난 25일 곡성군의의회에서 발생한 A의원과 B의원 간 몸싸움 사건 과정에서 불거진

돈봉투 관련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이 언론 등을 통해 지역의 이슈가 됨에 따라 내사 형식으로 돈봉투의 성격과 전달과정 등에 대해 살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이번 사건과 관련된 소문이나 풍문 등의 진

위를 파악한 후 본격 수사 진행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도 이번 사건과 관련된 당 소속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선 방침을 밝혔다.

전남도당은 현재 해당 의원과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현지 방문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들의 다툼 과정에서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당 당직자에게 공천금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는 얘기가 오갔다는

내용을 전해 듣고 당직자들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전남도당 관계자는 “2014년 도당 당직자 책상위에 봉투를 놓고 갔다는 얘기가 나와 진위 여부를 파악중”이라며 “명확히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는데다 직접 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사실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5일 곡성군의의회 의원실에서 무소속 여성 의원인 A의원 민주당 여성 비례의원인 B의원

를 잡고 싸움을 벌였다.

두 의원간 다툼은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에서 A의원이 바꾸쳐 문 화상품권 사용문제를 질의한 것이 발단이 됐다.

A의원은 바꾸쳐카드를 목적에 맞게 다양한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데, 주로 도서 구입에만 치중됐다고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이에 지역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B의원은 자신을 겨냥해 A의원이 질의했다며 이날 언쟁을 벌이던 중 거친 몸싸움으로 번졌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4년 공천과정에서 A의원의 요청으로 B의원이 민주당 전남도당 당직자에게 금품을 건넨 것까지 폭로돼 논란이 일었다.

A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으로 당선됐으나 지난해 의장단 선거에서 해당행위로 제명돼 현재 무소속 신분이다.

B의원은 A의원의 권유로 지난 선거에 나서 민주당 비례의원에 당선됐다.

곡성=김광휘 기자

오월어머니 “5·18진상조사위에 5월 당사자 참여 보장하라”



오월어머니들이 28일 오전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18진상규명위원회에 피해당사자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오월어머니가 5·18진상규명위원회에 5월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고 조속한 위원회 출범을 촉구했다.

오월어머니 등으로 구성된 ‘5·18진상조사위원 이윤정(조선대학교 정치학 박사) 후보 원

상회복과 올바른 진실규명을 위한 집단지성’은 28일 오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18진상규명위원회를 위해 피해당사자와 여성위원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5·18진상조사 특별법이 10월30일 통과 된 후에도 자유한국당은 자격이 미달된 이동욱씨를 위원후보로 거듭 재추천하는 망발을 거듭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윤정 조사위원 추천을 철회해 놓고 원상회복은 커녕 아무런 답변조차 없다”고 말했다.

이 “조속히 5·18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하고 유일한 여성인 이윤정 위원 자격을 원상회복하라”며 “5·18진상조사위원회를 앞세워 정치적 거래를 한 민주당과 한국당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윤정 교수는 민주당 추천 철회와 관련해 “민주화를 위해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여성에 대한 인격 실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흑산공항 공약 지켜라” 신안 주민들 세종청사 집회

“육지와 단절된 주민들 교통 기본권 보장” 호소



신안군 흑산공항건설대책위원회가 28일 세종시 환경부 앞에서 ‘흑산공항 건설 공약이행 촉구’를 위한 결의 대회를 개최하고, 조속한 심의 통과를 촉구했다.

대책위 소속 신안지역 14개 읍·면 주민 500여명은 이날 버스

17대를 나눠 타고 정부세종청사앞에 도착, 흑산공항 건설 이행과 수도권국립공원 해제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며 현수막과 피켓 등을 들고 항의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서 주민들은 “흑산공항은 육지와 단절된 삶을 사는 주

민들의 교통기본권을 책임지는 사업”이라며 “신안군민들의 간절한 의지를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

신안군에 따르면 흑산도는 매년 60만명 이상 관광객이 찾아오는 지역으로, 공항이 개항되면 전국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는 등 접근성이 개선돼 지역주민의 교통기본권과 이동권 확보, 관광객 편의 제공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불법 조업 외국 어선에 대한 감시·단속, 해상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난·구조 활동 등에도 공항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일윤 흑산공항건설대책위원회장은 “흑산공항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 인데도 환경부의 반대로 답보 상태여서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주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혁이는요... 자폐치료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려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랑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 중 자체재가발견, 자폐치료 중인 민혁군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 7인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